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김정균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태일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사 개요

이번

대경제연구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여론'이란 제목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전화 조사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방북 일행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6월 15일부터 실시해서 6월 16일까지 양일간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는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TV로 지켜본 우리 국민들의 흥분과 감동, 그리고 기대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671 명이였다. 응답자의 내부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330 명(49.2%), 여자 341 명(50.8%), 연령별로는 20대 175 명(26.1%), 30대 181 명(27.0%), 40대 130 명(19.4%), 50세 이상 185 명(27.6%) 이였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27 명(4.0%), 자영업 122 명(18.2%), 블루칼라 62 명(9.2%), 화이트칼라 170 명(25.4%), 주부 209 명(31.2%), 학생 35 명(5.2%), 무직/기타 46 명(6.8%)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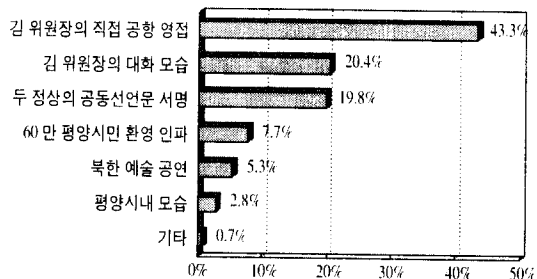
이번 조사의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8%이다.

정상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정상회담시 인상깊었던 장면

우리 국민들이 3일간의 정상회담 과정을 TV로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예상외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온 일' (43.3%)이였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의 농담, 파격적인 제스처 등 '김 위원장의 대화 모습' (20.4%), '두 정상역사적인 공동선언문 서명 장면' (1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60만 평양 시민의 환

〈그림 1〉 정상회담에서 인상깊었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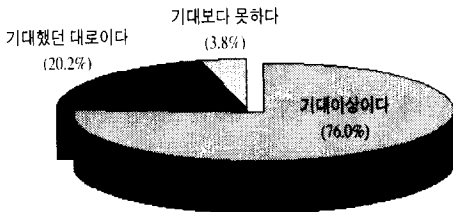


영' (7.7%), '북한의 예술 공연' (5.3%), '평양 시내 전경' (2.8%) 등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히고 있었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76.0%로 압도적이었다. '기대했던 정도'라는 응답이 20.2%였고, '기대보다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3.8%에 불과했다. '기대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20대(71.7%)보다는 40대(79.2%)·50세 이상(78.6%)의 고연령층에서, 그리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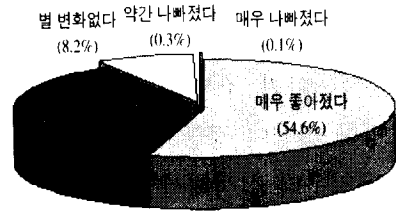
김 위원장 및 북한에 대한 인식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 국민의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이

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54.6%) 또는 '약간' (36.8%)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체의 91.4%였다. '별 변화없다'는 응답이 8.2%였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

<그림 3>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식 변화



대화파트너로서의 북한 신뢰도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북한을 대화파트너로서 신뢰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52.3%)는 의견이 '신뢰할 수 없다' (41.0%)는 의견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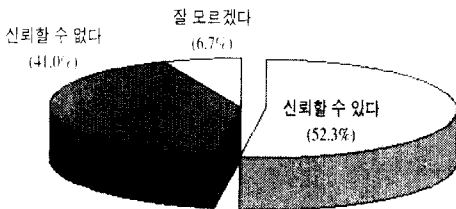
남자의 경우 북한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신뢰 63.3%, 불신 31.0%), 여자의 경우는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신뢰 41.6%, 불신 50.8%).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의 경우는 불신보다 신뢰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20대만은 신뢰(45.7%)보

다 불신(50.0%)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의 경우 신뢰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신뢰 70.0%, 불신 25.5%).

고향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커다란 차이가 났다. 북한이 고향인 국민들은 북한을 신뢰(41.4%)하기 보다는 불신(45.2%)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고향자는 불신(40.7%)보다는 신뢰(53.2%)가 더 많았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실향민이나 이남 고향자간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북한에 신뢰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향민들의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림 4〉 북한에 대한 신뢰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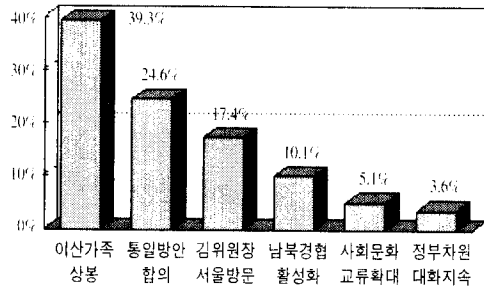
남북공동선언에서 중요한 과제

이번 남북공동선언문에서 나타난 내용 가

운데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39.3%)과 '통일방안의 합의' (24.6%)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50세 이상의 고연령층(50.5%), 실향민(45.3%) 계층에서 비교적 많았으며, '통일방안의 합의'는 20대(29.5%), 전라도 거주자(36.8%), 학생(31.7%) 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17.4%), '남북 경협 활성화' (10.1%), '사회 문화 교류 확대' (5.1%), '정부 차원의 대화 지속' (3.6%) 등의 순이었다.

〈그림 5〉 남북공동선언에서 중요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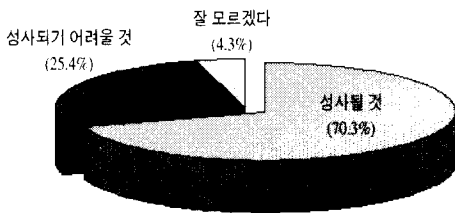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가능성

남북공동선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연내에 성사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해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70.3%로서 ‘성사되기 어려울 것’ (25.4%)이라는 비관론을 크게 압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낙관론은 여자(65.1%)보다는 남자(75.6%), 고연령층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김정일 위원장의 연내 서울방문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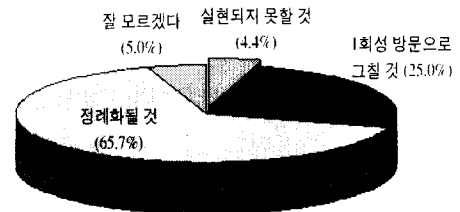
이산가족 상호 방문 전망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8·15를 즈음하여 이산가족 상호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산가족 상호 방문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적인가?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의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는 비관적인 의견은 4.4%에 불과했고, ‘일회성 방문으로 그칠 것’ (25.0%) 또는 ‘정례화되어 지속될 것’ (65.7%)이라는 낙관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향민의 경우 ‘정례화되어 지속될 것’ (남한 고향 66.2%, 북한 고향 59.3%)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회성에 그칠 것’ (남한 고향 24.0%, 북한 고향 36.0%)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산가족 상봉을 어느 누구보다 바라는 것이 실향민이지만, 실제도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이산가족 상호방문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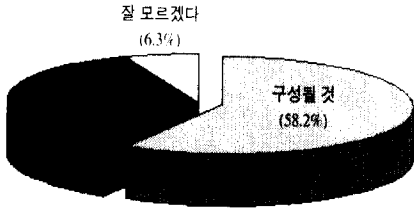


월드컵 단일팀 구성 가능성

2002년 월드컵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될 것으로 낙관하는 비율이 58.5%로서 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35.5%보다 더 많았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단일팀이 구성될 것’이라는 의견은 중졸 이하 50.5%, 고졸 58.8%, 대재 이상 60.7%로 나타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단일팀 성사를 낙관하고 있었다.

〈그림 8〉 월드컵 단일팀 구성 가능성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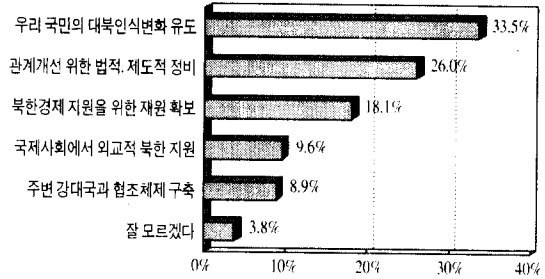
향후 우리 정부의 과제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중점 과제로는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 유도' (33.5%)가 1위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26.0%)와 '북한 경제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18.1%) 등이 언급되어, 남과 북의 관계 개선과 경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국제 정치 내지는 외교적 여건을 우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 (9.6%)하고 '주변 강대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8.9%)하자는 의견이 그것이다. 남과 북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내적 여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9〉 향후 우리 정부의 실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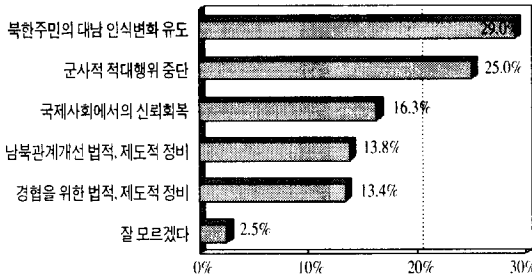
향후 북한의 과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우리 국민이 꼽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 변화 유도' (29.0%)였다. 즉 남과 북 양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분단 50여 년간 쌓여 온 주민들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작업이 일차적인 과제라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 (25.0%),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 (16.3%),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13.8%),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13.5%)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20대는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 유도' (32.7%)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 (17.2%)을, 40대는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 (28.9%)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17.2%)를 바라는 응답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10〉 향후 북한의 실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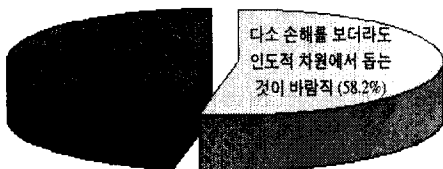
북한 지원에 대한 의견

북한 지원 자세

향후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자세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는 질문에 대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53.1%)는 의견이 '서로의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46.9%)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어업(63.4%), 블루칼라(59.5%), 화이트칼라(58.3%)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돕자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주부만은 '남북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그림 11〉 북한 지원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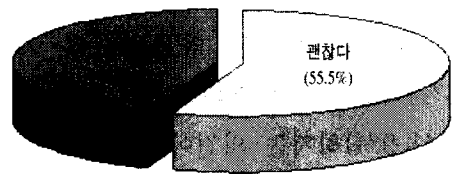
범위에서만 돕자' (52.3%)는 현실론이 더 우세했다. 직접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부들의 알뜰함을 엿보는 대목이다.

월가구 소득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에서도 '서로가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만 돕자' (53.7%)는 현실론이 더 많았다.

북한 경제 지원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해 '세금이 많아져도 괜찮다' (55.5%)는 의견이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반대다' (44.5%)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세금 부담 의향은 여자 (42.4%)보다는 남자(69.0%),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고향이 남한(54.8%)보다는 북한(63.0%)인 경우 더 많았다.

〈그림 12〉 북한 지원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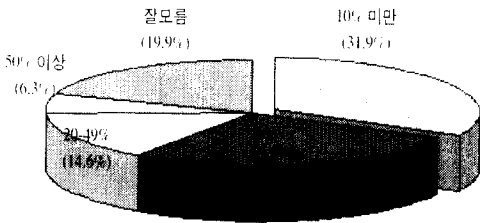
세금 부담 정도

세금이 많아져도 괜찮다는 응답자에게 어

는 정도 부담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다. 조사에 의하면 지금보다 세금이 평균 15.7% 인상되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론이었다.

부담할 세금 인상률은 '10% 미만' (31.9%), '10~19%' (27.3%) 등 20% 미만에서 세금인상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가 59.2%에 달했다. 역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부담하겠다는 세금 인상률도 높았다.

<그림 13> 세 부담 정도



경협과 우리 경제에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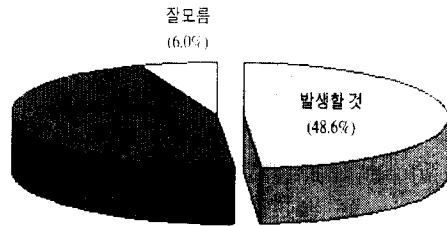
대북 특수 가능성

북한 특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통령 임기 중에 대규모 북한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 ‘발생할 것’ (48.6%)과 ‘발생하지 않을 것’ (45.3%)이라는 응답이 반분되고 있었다.

북한 특수 가능성을 낙관하는 계층은 여자(44.0%)보다는 남자(53.4%), 20대

(53.7%), 대재 이상(54.0%)의 고학력층이었다. 또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낙관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림 14> 대북 특수 가능성



경협의 우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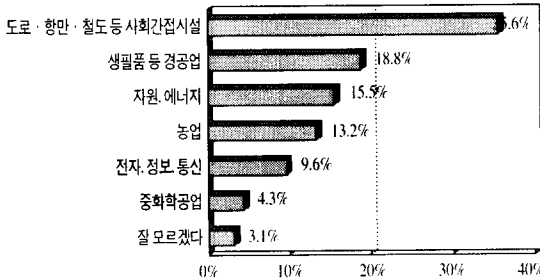
남북 경협의 우선 분야로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35.8%)이 1위로 꼽혔다. 2위는 ‘생필품 등 경공업’ (18.8%)이었는데, 북한의 어려운 일상 생활을 고려한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전력, 에너지, 자원’ (15.5%), ‘농업’ (13.2%), ‘전자·정보통신’ (9.6%), ‘중화학 공업’ (4.3%) 등이 언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발표 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이 초기 경협 단계로 꼽고 있는 것은 ‘SOC 투자’ (43.4%), ‘농업’ (31.3%), ‘경공업’ (24.2%), ‘첨단 산업’ (1.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전문가들에

비해 생필품 등 경공업 분야와, 전자·정보통신 등 첨단 분야도 경협 대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경협의 우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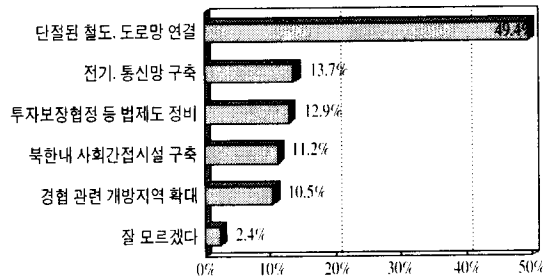


경협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과제는 '남북간 단절된 철도, 도로망의 연결' (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50세 이상 고연령층(63.4%), 중졸 이하 저학력층(70.9%), 150만 원 이하 저소득층(62.0%), 실향민(58.6%)에서 많았다.

다음으로 '전기통신망 구축' (13.7%),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법제도 정비' (12.9%), '북한내 도로 및 철도 등 시설 구축' (11.2%), '경협 관련 개방 지역 확대' (10.5%) 등이 언급되었다.

<그림 16> 경협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 전망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의 경제 전망은 정상회담의 감격과 놀라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냉담한 평가라는 것이 조사의 결과이다.

정상회담 이후 우리 경제가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8.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가장 많은 비율인 49.5%는 '별 차이 없을 것'이란 다소 담담한 전망이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변수가 우리 경제에 커다란 호재임을 인정하면서도, 낙후된 북한 경제를 위한 지원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97

<그림 1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 전망

